

독도소식지 11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 11호를 내는 것은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 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가 더 좋은 독도소식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독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지켜야합니다. 편집자

독도 가만두면 우리 땅인데 왜 지키려고 야단들이냐?

문: 독도 가만두면 우리 땅인데 왜 지키려고 하는가?

답: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 법으로도 우리 땅이 맞다. 일본 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독도에 경찰을 철수하라고 하고 독도에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한다. 일본 방위백서와 외교 청서에도 일본 땅으로 기재하고 자기들이 못 뺏으면 후세 가 뺏으라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일본 땅을 한 국이 불법점거 하여 돌려주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문: 일본이 그러다고 독도를 빼앗기냐?

답: 일본이 우기니 99년월 발효된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 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공동수역으로 되었다. 독도수역 절반을 빼앗긴 것이다. 또 일본 땅으로 선전 할 때 우리는 조용한 외교를 한다고 가만있었기에 세계각국지도 대다수 가 다케시마로 표시 되고 있다. 지도상 빼앗긴 것이다.

문: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 아닌가?

답: 우리정부는 국민들에게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말 했지만 일본은 우리 해양 연구원들이 해양조사 하는 것을 못 하게 하여 해양조사도 못 하고 돌아온 일이 두 번이나 있다. 일 본은 공동수역 안에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주장 한다.

문: 그러면 독도를 일부 빼앗긴 것 같은데 맞나?

답: 바다도 독도다 넓은 바다가 절반 일본의 권리이니 40% 빼 앗긴 것으로 본다. 지도상 일본해에 다케시마로 표시 되니 서류상 넘어간 것으로 보니 30%(등기와 같은 권리가 없기 에)넘어간 것으로 보고 종합 70% 넘어간 것으로 본다.

문: 우리 정부가 잘 못 한 것 아닌가?

답: 맞다. 정부가 잘 못 하여 독도바다는 공동수역 섬의 명칭 은 다케시마가 되었다.

문: 정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

답: 우리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잘 하도록 고치게 하는 것 을 독도를 지키는 길이라고 본다.

문: 정부가 잘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나?

답: 국민들이 여론을 만들면 정부는 정책을 고칠 것이다. 여론 을 무시하는 정부는 지지를 못 받아 선거에 패배를 한다. 1.독도연구 2.독도주거자유. 3.독도관광지개발. 4.독도 지킨 의용수비대 잘 모실 것. 5.신 한.일 어업협정 파기 재협상을 요구한다. (독도사수대, 네이버독도사수대, 본회 홈페이지 보세요) 2012년7월22일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수역은 공동수역 세계지도 대다수는 일본해와 다케시마이다

독도 옆 푸른 부분은 일본과 공동수역(절반의 주권)

울릉도와 오키도 중간이 해양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 독도를 포함해서 중간수역(일본은공동수역이라함)이 되었다. 독도 주변 수역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독도의 주권이 일부 넘어간 것이다. 우리는 방심 말고 독도영유권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독도연구와 자유입도 주거자유하고 해양경계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15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계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협정은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을 배제하지 않음 일본은 이 협정을 일본영유권주장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됨

붉은 글은 설명 글입니다 독도 이상훈 http://dokdomk.com 010-6504-6510



日 “한국 다케시마 불법점거” 10개 언어로 홍보 중

뉴스한국 | 입력 : 2008-12-09 16:04:11 | 수정 : 2008-12-09 16:04:11

일본 정부가 세계 10개 주요 국어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외 홍보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우리 정부의 대응이 요구된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일본어, 한국어, 영어 외에 중국어, 아랍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판 등 세계 주요 언어로 홍보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책자 형태의 PDF파일 형태로 올 2월부터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것인데 최근 추가로 번역판을 확대해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 이 자료 속지 첫 장에는 울릉도-독도, 경상도-독도의 거리와 독도-일본 오키섬, 독도-일본 시네마현의 거리를 비교하는 지도가 실려 있다. 이 지도 속에 독도의 동도와 서도는 ‘니시지마(오지마)’와 ‘히가시지마(메지마)’로 표기돼 있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는 “오키제도 북서쪽 약 157km,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의 일본해상에 위치하는 군도”라며 “시네마현 오키의 시마초에 속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 독도에 대해서는 “히가시지마, 니시지마의

2개 작은 섬과 그 주변의 수십 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0.21km²(히비야 공원과 거의 같은 면적)”이라며 일본식 상세 지명 표기가 두드러진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고 역측을 부리고 있다. 또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이밖에도 어처구니없게도 독도가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목도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야욕을 저버리지 않고 치밀하게 인터넷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이 우리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세밀하고도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독도 지키기 홍보전쟁에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장태호 기자

[李대통령, 독도 방문] 日, 대형분쟁 일으킬 카드 여럿 보유... 도상(圖上)연습 돌입

이용수기자 이메일 hejsue@chosun.com 입력 : 2012.08.11 03:10

일본의 독도 전략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

- ① 해양순시선 파견 2006년엔 총격전 직전까지... 국제 문제화 가능성
- ② 다케시마의 날 제정일본 총리가 야당의 요구 수용하는 방식 취할 듯
- ③ 극우단체의 독도 상륙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처럼 기습 상륙 시도
- ④ 독도 근처 자위대 주둔오키섬에 자위대 보내면 우리도 독도 해병대 주둔
- ⑤ 경제 무기 동원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감 커져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다양한 대응 조치 검토에 바로 착수했다. 총리실과 외무성, 방위성 등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독도 해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도상 연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궁극적 독도 전략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독도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다. 일본이 교과서, 외교청서 등에 머물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물리적 수단을 동원, 분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지율이 낮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연말에 실시할 가능성이 큰 중의원 총선을 겨냥, 독도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①해양조사선 및 해양순시선 파견

일본은 2000년대 해류 조사 등을 명분으로 독도 주변에 해양조사선을 파견하곤 했다. 또

2006년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 일본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내 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다. 당시 한국 측 해군 함정이 파견되는 등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2006년 당시 총격전이 벌어질 뻔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또 동해 상에서 한일 어선이 조업을 벌이다 충돌할 경우 순시선을 출동시켜 한국 어선을 나포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일본의 각종 도발을 무시하며 독도의 영토 분쟁화를 막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끝

독도사수연합회는 주장 한다

일본에게 우리 땅을 너의 땅이라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일본이 아니다. 일본이 자기 땅이라 하면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 묵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묵인을 하면 국제 법에 가면 더 불리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차곡차곡 우리 땅인 근거를 더 찾고 국제 법에 가도 더 유리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독도연구. 못 살게 하는 법 폐지. 독도 관광지 개발. 독도의용수비대 더 우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과 독도분쟁이 커 질것을 우려해서 우리 마음대로 못 하면 나중에 더욱 우리가 불리해진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실효지배를 하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무시하며 분쟁을 막아 온 것은 독도침략을 묵인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독도가신 것 늦었지만 잘 하신 것이다. 차기대통령도 취임 후 독도를 순방 하는 것이 국제법으로 유리해 진다.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회, 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 시민단체들 협력하여 행사 함



▲ 김정(청정국악예술원장 공연)척령제정반포재현(덕수궁)



▲ 고종황제 독도척령제정 반포 행사에 모인 애국시민들



▲ 독도 척령 행사에 단체들이 태극기로 활동



▲ 제3회 독도날 행사를 하는 애국시민단체들(부산역)



▲ 행사에서 책자를 무료 배포하는 자유총연맹 회원들



▲ 독도행사에 참여한 자유총연맹 부산지부 회원들



▲ 독도사수연합회 홍보대사 가수 서희(국회의원회관)



▲ 독도척령행사에 농악단들이 참여하여 (국회의원회관)



▲ 고종황제 독도척령제정112주년기념식(국회의원회관)

“제3회독도 날”과 “고종황제 독도척령 제정112주년 기념식” 대하여

“제3회독도 날”과 “고종황제 독도척령 제정112주년 기념식” 대하여

2012년 10월25일에 독도행사를 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제3회 독도 날 행사를 하는 사람들과 “고종황제 독도척령 제정 112주년 기념식”을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고종황제 독도척령 제정112주년 기념식” 1900년10월25일 고종황제께서는 울릉군수에게 울릉본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제국 땅임을 만국에 알린 근거를 만드셨다. 이 사실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NGO포럼(독도시민단체대표자회의)에서는 2008년 “고종황제 독도척령제정108주년 기념식”을 하기로 의결한 이후, 탑골공원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해왔고, 금년에 탑골공원, 덕수궁,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11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제3회 독도의 날”

제3회 독도의 날 행사는 일본이 7주년(8회)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3회 독도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제가있다.

독도NGO포럼(독도시민단체대표자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새삼스럽게 독도의 날을 만듭으로써 1회를 기록할 것이 아니라 고종황제께서 독도척령을 제정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고종황

제 독도척령 제정 113주년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NGO포럼(독도시민단체대표자 일동)

한일 과거사 인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높은 국제법 학자의 제언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오늘 2010년 8월 10일,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은 일본 정부가 1995년 「우라야마 담화」에서부터 반복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부당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역시 유효한 것이라는 소위 「유효부당론」의 수준을 굳게 지키는 선에서 머물러 있다. 모처럼 한일 간 새로운 지평의 동반자 관계를 열겠다는 일본 정부의요란한 선전과 함께 발표된 총리의 담화가 한일과거사 문제에 관한 이러한 원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한일 병합조약은 법적으로 전혀 성립된 적이 없는 무효의 조약이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부당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역시 유효한 것”이라는 소위 「유효부당론」은 법적으로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100년 전에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당시의 국제공법상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인정될 수 없는 순종 황제가 일본제국과 체결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일본 제국이 일본 제국 자신과 체결한 《허위의 조약》”에 불과하며, 따라서 조약체결 주체의 근본적 흠결로 인해서 조약법 상의 여타 세부적 요건의 흠결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일제의 한국 병합이 불법임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한일간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에서 일본에게 「한일병합조약」이 시제법적 시각에서 유효한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한 모호한 협약 조항을 수용한 한국 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한일 간 이른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숙제로 지금까지 존속되어 온 것이다.

아직까지도 「한일병합조약」의 성립 무효를 국제법 이론상의 정론(正論)으로 확립시켜 놓지 못한 한국 국제법 학자들의 혼돈과 나태 또한 비판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구나 오늘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담화에서 일본이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그 외교부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무성의와 부당한 국가적 오만을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일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의 밝은 한일관계를 개척해 나가려는 간 총리와 일본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의 왜곡된 입장 표명을 수긍하고 환영하고 있다. 국제법적 안목으로 볼 때 한국 정부의 이러한 법적으로 무지(無知)하고 무사(無思慮)하며 굴욕적인 태도는 향후에도, 한일간의 관계가 불평등하고 잠재적 충돌 요인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매우 불행한 관계로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에 양국간의 평등하고 활발한 협력과 교류의 확대를 절실히 갈망하는 한 국제법 학자로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제법 학계와 한일관계를 걱정하는 모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2010년 8월 10일
려해연구소 김 영구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 8편



이런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판단을 떠나서 좀 더 현실적인 고찰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종전 이후 유럽에서의 패전국인 독일과 아시아에서의 패전국인 일본이 처한 전략적인 상황은 기본적으로 아주 유사(類似)한 것이었다. 점령 주체인 전승국 즉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 측이 유럽에서나 아시아에서 공산권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된 것, 점령국들이 전범국(戰犯國)들(즉 독일과 일본)에게 군대 보유의 제약 등 전략적 억제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은 정확히 동일하였다. 아주 명백한 차이는 유럽에서는 “독일을 소련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과제로 삼아, 더 이상 적국(敵國)이나 침략자인 패전국(敗戰國)이 아니라 전승국 특히 미국의 충실한 동맹자(同盟者)로 간주하는 것” 같은 일은 없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유럽에서는 새로운 군사적 위협인 공산권의 진출을 저지함에 있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등 군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미국의 동반자가 전승국들 중에 있었으나 아시아에서는 잠재적인 것이거나 일본과 비견할 군사적 역량을 보유한 국가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있었다. 중국은 ‘카이로 선언’ 등에서 미국, 영국 및 프랑스 등과 나란히 2차 대전의 종결을 주도하는 ‘4대 강국’의 하나로 참여한 바가 있다. 그러나 본래 당시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것임을 당시 연

합국들도 잘 알고 있었으며 더구나 중국은 종전에 임박해서는 자국의 국내문제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처지였다. 당시 미국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볼 때, 한국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면에서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보탬이 될만한 군사역량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었다. 바로 일본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는 태평양 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인 장본인이다. 그는 사이판(1944년 6월 11일~7월9일)과 필리핀 해전(1944년 6월19일~6월21일) 등에서 일본군에 비해 훨씬 월등한 병력과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도 일본군의 치열한 저항을 받고 어렵게 승리한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일본의 군사적 잠재력을 특별히(어쩌면 誇張되게) 중시(重視)하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2차 대전의 적국(敵國)이며 잔혹하고 야만적인 침략 행위를 자행한 패전국(敗戰國)인 전범국가(그것이 독일이든 일본이든)를 갑자기 미국의 충실한 동맹자(同盟者)로 간주하여 소련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 전략상의 동반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 것이 아무리 절실한 실용적인 이유에서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진실(眞實)과 정의(正義)에 반(反)하며,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음호에 계속) **홍피 교수** 논문에서 볼 수 습니다.
독도 이상훈

연예계, 동해→일본해 또 표기실수 '이대로 괜찮나?'

[TV리포트=김지현 기자]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이하 '서프라이즈')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오전 방송된 '서프라이즈'에서는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지도가 그대로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중화권 가수 등려군의 일대기가 소개됐다. 제작진은 등려군의 일본 진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려진 지도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지도에는 동해가 'East Sea'가 아닌 'Sea of Japan'라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를 그대로 쓴 것. MBC는 지난 6월 방송된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한 바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같은 실수가 두 번이나 발생해 더욱 논란이 됐다. 실수는 방송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개봉된 장동건, 오다 기리 조 주연의 영화 '마이웨이'는 티저 예고편을 공개하는 과



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영화 배급사 측은 "한중일 합작 영화이다 보니, 일본 현지 예고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처럼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스스로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면 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포털사이트 구글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어가는데 연예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방송과 영화계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두번도 아니고 화가난다", "이런 건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정말 주의해야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홍문표의원, "말뿐인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예산 전액 미반영

일본 홍보예산 143억 원에 비해 우리는 33억이 고작

양승용 기자 | kromj@newstown.co.kr 승인 2012.11.08 10:22:42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이 국토해양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들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올해 74억원의 실시설계비가 투입된 '독도방파제 건설 사업' 내년도 예산은 국토해양부가 자체구입비로 5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 4천74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던 독도방파제 사업은 74억원의 설계비만 낭비한 채 중단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0년 12월 차관 회의에서 본 사업에 대해 일본 위협용으로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차후에 일본과의 의견을 감안하여 추진키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독도 방문객 증가에 따른 방문객 안내소 '동도'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총 90억 사업비)도 주민숙소의 기능을 기존의 '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8억원의 설계비예산만 낭비한 채 사업자체가 무산됐다. S-독도 입시센터 : 독도 방문객 2004년 1천900명→2012년 20만 명 이상 대폭 증가하여 방문객 체류지원 등 다목적 용도로 동도에 건립



▲홍문표의원 (새누리당-예산·홍성)

한편, 외교통상부 및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독도 홍보 예산을 확인한 결과, 일본은 내년 독도 국제 홍보비 예산으로 85억 등 총 143억원을 책정한 반면, 우리 정부는 홍보비로 3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일본에 4배 이상 작게 정부안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문표의원은 "일본이 독도 야욕을 노골화할수록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관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고, 홍보 예산도 '쥐꼬리' 만큼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년 '외교부 독도예산' 국회서 20억원 증액

[SBS뉴스]김태훈기자최종편집:2012-11-11 13:51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통상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이 국회상임위에서 대폭 증액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독도와 관련된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 62억2천만 원이 포함된 2013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외통위를 통과한 독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 42억2천만 원보다 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외통위는 일본의 전방위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 전문가, 정치인, 언론인 등 주요 국가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독도 예산을 늘렸습니다.

4면에서 계속 독도주인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독도를 빼앗긴다고 생각은 안 한다. 일본은 국제재판을 하자고 한다. 우리는 안 하면 된다고 생각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다. 독도주인은 방심 하지 말고 독도 지키는 운동에 협조를 하라.

독도 이상훈

광고 모집합니다. 독도마트

http://dokdomart.com

페이스북 마저 '독도 없이 일본해'

ZDNet Korea 원문 기사전송 2012-11-24 08:48 최종수정 2012-11-24 08:48

페이스북 지도서비스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와 고유지명 '동해'를 '리앙쿠르암'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갖춘 글로벌 IT업체 가운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네 번째 사례다. 23일 현재 페이스북에서 메시지 업데이트 장소를 독도나 동해로 써보면 각각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된 온라인 지도를 연결해 준다. 리앙쿠르암은 일본측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가 아니라 주인 없는 암초를 뜻한다. 게다가 일본해 명칭 표기가 그 위치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식명칭인 동해는 강원도 원산만에 인접한 영역에 일본해와 병기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영해가 울릉도도 아우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협소하게 인식된다.

■원인은 구글-MS지도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지도는 페이스북 자체 지도 서비스가 아니라 MS가 제공하는 빙맵이다. 빙맵은 MS와 노키아가 갖고 있는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정보와 지명을 표기한다.

▲ 페이스북에 연결된 MS 빙맵의 독도와 동해 위치. 리앙쿠르암과 일본해만 써 있다. 웹브라우저, 윈도폰, 윈도8에 서비스되는 MS 지도 역시 빙맵인데 모두 독도와 동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MS가 애플과 마찬가지로 지도데이터 반출을 제한한 국내 실정법에 맞추지 않고 일본 지도업체 데이터만 활용하는 해외 서버를 운용한 결과다. 사실 페이스북은 MS뿐아니라 구글 지도도 활용한다. 다만 네이티브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용자들만 그 기능을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 iOS와 안드로이드용 페이스북 앱 사용자가 '체크인'이나 현재 장소에서 특정 위치로 '찾아가는 길 보기'를 하면 빙맵이 아니라 구글지도로 연결된다. 그외 모바일앱의 위치정보 관련 기능은 PC나 모바일 웹에서와 마찬가지로 MS지도를 연결해 준다.

임민철 기자 imc@zd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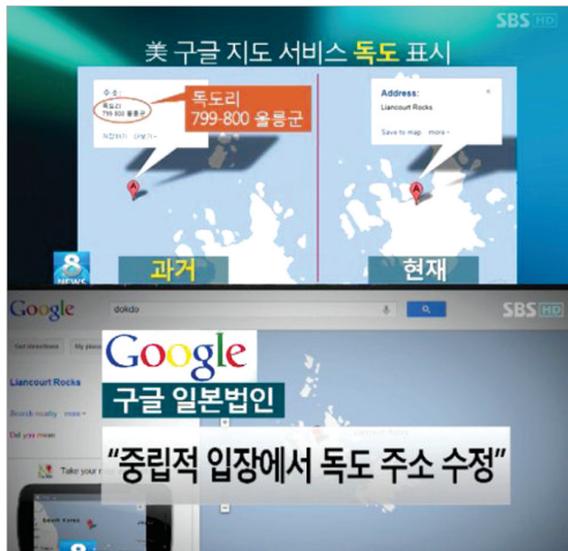
이후 생략 독도사수대 심각한독도 게시판 보세요.

독도가 위험하다

독도주변 바다는 일본과 공동수역이 되었고 다른나라 지도는 일본해에 다케시마로 되어있다.

인터넷사이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4개사가 독도나 동해로 써보면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된 온라인 지도를 연결해 준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자기 것이라 해도 우리가 무시만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민들 독도 지켜야지. 빼기면 안 되지. 소리는 질 하지만 독도를 지키는데 도움은 못 준다. 혹 어떤 사람은 할 줄 몰라서 못 한다고 한다. 회원가입 하는 것. 독도에 사람 살게 개발 하자는 서명운동 하는 것. 도움이 된다. 독도주인이 누구인가? 전 국민이 주인이다. 정부가 잘못 하면 독도는 넘어 갈 수도 있다. 일본이 독도를 빼으려 하는 것은 3면에서 계속 함

日요청에 구글맵 '독도' 주소 삭제...분통터진 '독도의 날'



[구글맵 독도 주소 삭제 사진=SBS 방송캡처]

[뉴스핌=이슈팀] '독도지킴이' 가수 김장훈은 독도의 날을 기념해 10집 앨범 타이틀곡 '없다'를 공개한 1가운데 미국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이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구글 맵'은 지금까지 독도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검색창에 '독도(Dokdo)'를 검색하면 독도의 지도와 함께 '독도리 799-800 울릉군'이란 한국 주소가 표시돼 왔다. 그러나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일본 정부와 시마네(島根)현의 항의를 받아들인 구글 측은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하고 명칭도 '리앙쿠르 암초'로 변경했다. 대신 구글은 지난 19일부터 '구글 맵' 한국판에는 '독도'로, 일본판에는 '다케시마(竹島)'로 각각 표기하는 것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25일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민간단체들이 영토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선포한 '독도의 날'이다. 2012-10-25 23:52

日 자민당, 위안부 반론 강화 및 다케시마의 날 정부 차원 행사 격상 등 극우 공약 발표

기사등록 일시 [2012-11-21 15:06:33]

[서울=뉴스] 유세진 기자 = 다음달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차기 정권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자민당이 21일 중의원 선거에 대비한 정권 공약을 발표했다. 자민당은 '일본을 회복한다'라는 제목의 공약안에서 "위기 상황에 빠진 일본의 외교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하고 총리 관저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총리 관저 주도의 기동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입안하고 정보의 수집·평가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대표가 과거 총리 시절 일본판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로 신설하려 했던 것으로 '아베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자민당 공약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극우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부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재 시마네(島根)현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

해 정확한 반론과 반증을 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대표가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디플레이션과 엔고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2%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법을 개정하고 정부와 일본은행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대담한 금융 완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신설해 경제·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자민당은 밝혔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재가동의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할 경우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토강인(強靱)화 기본법'을 제정해 공공사업을 포함해 10년 간 집중적인 방재·감재 대책을 추진,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 인건비 억제 등으로 2조8000억엔의 세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공약은 밝혔다.

dbtpwls@newsis.com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 원서 (회비 1,000원 이상 마음대로)

성명	생년월일 :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소 (자택)	우편번호 :		
(직장)	우편번호 :		
직업(명)	소속단체 :		
E-mail			
참고 사항			
년납 ()	월납 ()	회비	자 동: 이체 ()
자원봉사 =년	회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납부	수시납: 현금 ()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귀하

보낼 곳 : 607-809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35 (명장1동)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소식지 11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나라가 없으면 국민은 없고 민족만 있을 뿐입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주)동아인업 황성일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후원 하실 분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